

서울 21세기: 변화의 관리와 환경학의 역할

강 홍 빈*

〈目 次〉

- | | |
|----------------------|---------------------|
| I. 코끼리의 코: 또는 변화의 관리 | III. 서울 21세기 구상 |
| II. 서울에 불어오는 바람 | IV. 변화의 관리와 환경학의 역할 |

I. 코끼리의 코: 또는 변화의 관리

코끼리는 코가 길다. 긴 코로 나무 위에 높게 달린 열매와 부드러운 잎을 따먹고 산다. 어떻게 해서 코끼리는 긴 코를 가지게 되었을까? 누구는 코끼리가 원했기 때문에 코가 길어졌다고 한다. 나무위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 늘이다보니 코가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이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원해서가 아니라, 코길이가 다른 여러 코끼리 중에서 긴 코를 가진 코끼리들이 더 오래, 더 많이 살아남게 되어 결국 오늘날의 코가 긴 코끼리로 “진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종의 진화에 대한 라마르크와 다윈의 해묵은 논쟁을 새삼스럽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논쟁으로 대표되는 “목적론적” 입장과 “결과론적” 입장이 사회현상에 가지는 시사점들을 토론할 생각도 아니다. 다만, 진화론의 “과학적” 진실성과는 별개로, 어느 경우에서나 영양가 많은 먹거리가 나무위에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보다 코끼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토론하고자 할 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효과적인 행동은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평범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이다.

생존의 여건과 그 여건이 던져주는 과제를 안다고해서 해결책이(코가 길어지는 것 같은)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아마 코끼리라면 주어진 숲의 상황속에서 타고난 코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아직 닦치지 않았지만 멀지않아 닦치게 될 상황을 미리 그리면서, 이에 대비하는 수단을 먼저

* 서울시청 시정연구원(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제1회)

준비하는 능력이 있다. 과거의 궤적을 뒤돌아보고 미래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에 따라 행동을 “계획”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물론 계획을 한다고 계획대로 세상이 다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계획없는 행동은 나침반 없는 배처럼 물결따라 흘러가는 데에 그친다.

어떻게 보면 환경대학원이 태어나 성년에 이른 지난 한 세대 동안 서울이 겪은 변화는 나침반 없는 배와 같은 형편이 아니었던가 싶다. 물론 이 짧은 시간 동안 서울이 이룩한 변화는 눈부시다. 배추밭과 과수원, 판잣집의 달동네에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강북의 옛동네에는 높은 호텔, 사무소, 백화점 빌딩들이 솟아나고, 강변과 하천변에는 고속도로가 놓이고,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길들, 다방 대신 커피전문점, 구멍가게 대신 슈퍼, 목욕탕이 사우나로, 선술집이 카페로 바뀌었다. 그동안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는 남산만한 산을 이루었으며,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서울의 공기는 숨쉬기조차 어렵게 변했다.

서울이 겪은 지난 20년간의 숨가쁜 변화를 놓고 우리가 의도하여 계획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어찌 어찌하다 보니 지금의 서울이 이루어졌다는 편이 정확하겠다. “계획이 현실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계획을 끌고 나갔다”는 최상철 교수의 지적이 설득력있게 느껴진다. 물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도는 분명 있었지만 이들을 한데 묶어 일관성을 부여하는 원칙과 방향은 결여되었으며(도시기본계획은 수정, 백지화를 거듭해서 재작성해야 확정되었다), 설령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라도 워낙 변화의 속도와 폭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시대 서울의 변화는 미래를 향한 변화라기 보다는 권태준 교수의 통찰대로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변화였다. 급류에 흘러가는 배에 동승한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보다는 출발지로부터 멀어지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행정가, 기업가, 시민, 전문가 할 것 없이 모두 열정적으로 동참하여 변화를 이룩하였으나, 그 물결에 휩쓸려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급격한 변화를 살았으나, 이를 의식하지도 의도적으로 관리하지도 못했고, 가속된 시간속을 살면서도 과거와 미래를 보는 역사의식을 키워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행정에 관한 한 지금에 와서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시청이 시예산의 대부분을 들여 골몰하고 있는 사업들과 시책은 모두 지난 급성장기가 남겨놓은 문제들에 대한 뒷치닥거리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력, 환경오염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고민, 달동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모두의 지혜와 온 자원을 투입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큰 과제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의 해결만으로 서울의 미래가 보장받지는 못한다. 미래 개척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이제 거대도시로서의 서울도 성년이 되었고, 도시학의 전당인 환경대학원도 성년이 되었다. 일상의 현실에서 눈을 떴고 지나온 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봄직한

위치에 섰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최정호교수의 표현대로 꿈을 꾸는 일이며,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 일이다. 그 자체로서 지적 만족감을 준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의 미래를 생각하려고 하는 데에는 보다 절박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제까지 전개되어온 상황과는 무척이나 다른, 어쩌면 도시사의 커다란 “파라다임” 변화라 할만한 새로운 상황이 미래의 서울을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까지의 관행과 문제의식, 행정 행태만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서울에 닥쳐올 과제와 도전을 풀어가기 어려우리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뒤늦기 전에 새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처하는 수단을 준비해야 하리라는 생각이다. 도시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닥쳐오는 미래상황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Ⅱ. 서울에 불어오는 바람

일견 서울은 이제 다 자라서 더 이상의 큰 변화가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용 택지는 거의 고갈되었으며, 낼 수 있는 길은 거의 다 지상, 지하에 만들어졌고, 들어찰 수 있는 시설들은 거의 다 들어찬 듯 보인다. 실제로 고질적인 인구의 사회증가는 눈에 띄게 둔화되어서, 어떤 학자들은 장래인구의 감소를 점치기도 한다. 서울의 절대집중시기는 지났고, 이제 상대분산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김인교수의 분석도 있다. 날로 심해지는 교통난, 환경공해와 주택부족, 높은 생활비 수준으로 서울은 더 이상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선진도시들이 경험한 인구의 “U”턴 현상을 서울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1980년대의 동경처럼, 한동안 성장둔화의 모습을 보이다가 국제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다시금 집중현상을 보이게 될 것인가?

지난 한 세대 남짓한 세월에 서울을 세계 몇번째의 거대도시로 자라나게 한 원동력은 “나라안으로부터의 바람”이었다. 앞서 언급한 “과거로부터의 탈출의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킨 서울에의 힘과 정보, 자본, 노동력의 집중이 오늘날의 서울을 만들어낸 바람이었다. 그러나 서울을 미래세계로 옮겨다 줄 바람은 안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라밖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될 것 같다.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함께 개편되는 세계경제질서, 개방화와 지역화의 두 흐름속에서 서울이 가지게 될 위상에 따라 서울의 도시적 내용이 규정될 터이고, 다시 그러지는 국제정치 지도속에서 서울의 공간구조는 큰 윤곽이 잡혀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서울은 잃든 좋은 세계도시체제속에 편입된 하나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와 도시사이의 상관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임을 시사한다. 지난 시대에 도시는 경제의 공간적인 표현이자 그 결과였으며, 도시행정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가져온 문제들의 뒷치닥거리를 하는 일일 수 밖에 없었다. 어쩌면 미래 서울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뒤바뀌어야 할 지 모른다. 도시관리는 경제의 뒷치닥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시경제의 총체적 생산성을 키우고 경쟁도시에 대한 비교우위를 획득하도록 앞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는 국제화의 시대라 한다. 이념의 대치 대신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국경없는 전쟁에서의 첨병은 나라가 아니라 도시들이다. 경제활동의 집적지인 거대도시들이 시장지배력을 넓히기 위해 각축을 벌인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세계로 향한 창”인 서울의 국제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명제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서울 뿐 아니라 나라 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로 등장한다. 한 도시의 국제경쟁력은 그 도시가 얼마만큼 실질적인 부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국제기업을 유치하고 세계로 향한 경쟁력있는 국내기업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이러한 능력은 한편 다양한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 기반과, 세계와의 정보 수신, 발신 능력, 또한 경쟁도시와 비교 우위를 갖는 문화적 매력과 건강한 환경,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기반시설과 개방적인 시민의식을 요구한다. 서울의 국제화추세는 필경 이러한 도시적 기반의 확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점차 모습을 들어내는 세계의 3극 경제체제 속에서 서울이 설 자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동경, 홍콩, 북경과 함께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서 태평양과 대륙경제권을 잇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어느 경제보고서에서 예견하는 대로 도시경쟁에서 뒤떨어져 동경은 물론 싱가포르와 홍콩, 상해와 오사카에 훨씬 뒤지는 지역도시로서 정체되고 말 것인가?

서울이 세계도시로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중국, 소련 등 대륙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통일 내지는 관계정상화가 가져오게 될 지정학적 변화다. 냉전시대의 서울은 “자유 진영”의 변방에 위치하여 반쪽이 잘려진 도시일 수 밖에 없었다. 대륙으로 열린 문이 아니라, 대륙으로의 통로가 닫힌 채 남쪽의 좁은 통로를 통해 서방세계와 연결된 외진 위치의 도시였다. 그러나, 북쪽과 서쪽이 터지면서, 서울은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연결고리에 자리잡게 된다. 근대사의 고난을 가져오게 한 지정학적인 특성이 반전되어 오히려 세계속에 서울과 한국의 위상을 키워주는 여건이 될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트란스 시베리아” 교통축이 서울을 통해 동경과 유럽을 연결하는 상황도 전혀 비현실적인 꿈은 아니다. 지정학적 변혁이 제공하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데에는 물론 현재 남쪽으로부터 열려진 서울의 편심적 도시구조가 큰 장애가 된다. 서울의 도시구조를 새로운 여건과 기회에 맞추어 개조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아직 남아있는 서방방향의 저개발지역이 서울의 도약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지 못하고, 당장의 개발압력에 밀려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행정의 큰 과제다.

막혔던 대륙으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상황변화가 서울의 국제도시화를 구조적으로 촉진하는 기회라면, 현재 서울이 보이는 정보기반의 취약성은 서울경제의 국제경쟁력 신장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남는다. 오늘날 정보의 수신, 발신, 처리능력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핵심요소다. 전통적인 경제활동의 입지가 교통접근성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국제적 기업활동의

입지는 정보에의 접근성이 오히려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동경이 정보화 도시계획을 추구하면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정보항의 건설을 서둘러온 것도, 상해와 요코하마, 파리와 런던이 유사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다. 서울의 경우 이러한 준비가 너무 뒤져있다. 이제 겨우 텔리포트의 조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지만, 경쟁도시들에 비해서 정보고도화의 문제를 도시계획과 연결시키려는 문제의식조차 아직 생겨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도시발전은 건전한 도시재정을 기초로 하며, 건전한 도시재정은 건강한 도시경제를 전제로 한다. 도시의 물리적 개발과 경제활동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명한 사실이 현재까지의 계획에서는 등한시되고 있다. 도심의 경제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업의 경영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사업에 따른 교통유발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으나 사업으로 파생될 고용과 도시경제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경제의 정보화, 고도산업화의 진행을 촉진하여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제조업을 도시에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공업지역의 변화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과거 서울의 경제를 지탱한 기반은 영등포와 구로 등 공업지역에 위치한 제조업 부문이었다. 종로, 중구는 소규모 가내공업,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점차 서비스 산업이 자라나면서 전통적인 공업지역은 커다란 내적 변화를 겪고 있다. 개발수익을 노리고 공장이적지를 아파트나 백화점, 상업시설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을 잃고나면, 서울의 경제적 활력은 훨씬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을 유지하고 도심 안에도 가내공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 도시경제의 국제화, 정보화는 피할 수 없는 명제다. 이를 위한 도시계획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제화, 정보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인가? 정보화, 국제화 진전은 기존 상업중심지의 강화와 국제 금융센터의 집중 등을 조장하고 노동력의 전문직 비중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지가양등을 부채질하여 주거부문은 물론 학교, 커뮤니티 서비스 등의 쇠퇴를 가져와 주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택난의 심화에 따라 주택소유자, 비소유자의 생활격차가 심화되고, 전문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노동자와 전문직종사자 사이의 사회적, 공간적 계층 양극화 현상이 생겨날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역내 저개발국가와의 임금격차가 커지게 되면 외부로부터 단순노동자가 많이 유입되어 독일이나 일본에서 보이는 사회, 문화적 갈등을 만들어낼 위험도 적지 않다.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중요한 검토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이 통일될 경우 서울이 감당하여야 할 인구유입의 양과 형태는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서울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또한 도시구조와 행정수요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와 부담을 가져올 것인가? 인구의 노령화 추세

는 지금대로 계속 아시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 이러한 변화가 요구하게 될 산업, 복지정책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현실적인 전망과 대책이 요구되는 일들이다.

서울안과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통체계의 큰 변화는 도시의 물줄기가 바뀌는 큰 변화이다. 도심 고속도로와 지하철망의 구축, 영종도 국제공항과 경부고속전철의 건설, 수도권지역 전철화계획의 추진 등은 기존의 교통접근성의 분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구조적인 사건이다. 이로 인한 사람과 물동량의 수송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로 인한 지가분포와 토지이용패턴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도시발전의 거점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지역은 어디이며, 난개발을 사전에 막아야 할 지역은 어디인가? 이 또한 중요한 검토과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이면서 서울의 대외적 비교우위와 직결된 문제다. 앞으로는 도시를 하나의 생태권으로 보는 접근시각이 정착될 것이다. 도시는 물과 공기와 제품을 소비하고 폐수와 오염된 공기와 폐기물을 생산한다. 맑은 물과 공기를 유지하면서,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생시키는 일은 환경요소를 개별적으로 다루거나, 작은 지역단위로 접근해서는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보전과 개발을 상호배제적인 양극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다루도록 하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을 관리하고 도시개발을 생태보전적인 차원에서 조절하며, 폐기물을 생산장소에서 재생하는 등의 노력이 자라날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행정제도와 기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주택문제 역시 계속 주된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계속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큰 과제로 남겠지만, 이와 함께 노인가구, 독신가구를 위한 다양한 위치와 형태의 주택공급이 또한 과제가 된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의 밀집지역에 대해서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문제가 행정의 큰 부담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택지의 고갈로 기성시가지의 고밀도개발이 불가피하게 추진될 것이나, 이에 따른 양질의 주거환경 파괴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화에 따른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또한 통근권이 점차 확대되면서 외곽 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중심기능의 조성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도시관리 기본과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아직까지 도시행정이 주로 도시의 “하드웨어”를 만들고 늘리는 일로서 접근되었다면, 앞으로는 기성의 도시를 정비 관리하는 일과 도시 서비스를 늘리고 고급화하는 “소프트웨어”에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을 뜻한다. 도시는 더 이상 “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망상조직으로 이해되어야 할 상황이다. 또한 도시는 더 이상 관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민간부문의 활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변모되는 상태로 이해되어야 됨을 뜻한다. 일방적인 “개발목표”의 설정과 일사불란한 집행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혼란스럽지만 공개되고 분산적이며, “소프트”한 행정이 요구되는 사회로 변모해 간다.

문민화, 지방화시대에 따른 행정의 역할과 행태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심적인 과제의 하나다. 여지껏, 도시행정의 주된 관심사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보다는 도시개발의 기획과 관리라는 측면이 강했다. 기획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공부문이었으며, 민간부문은 공공에 의해 이끌려지는 존재로 여겨졌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하향적 접근방법속에서 정보의 공유는 “특혜”의 시비를 두려워하는 관에 독점되기 일 수 있으며, 하향평준적인 확실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민간부문은 오로지 직접 이해가 엇갈릴 때 목청을 높임으로서 이익을 보호하는 정도의 참여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민화의 시대는 여론과 참여를 전제로 하며, 이는 다시 정보의 공유와 정책입안과정에서의 참여를 요구한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다양성과 임기응변적 대응을 요구한다. 민간활력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 당연히 중앙집권적인 권한의 분산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조직과 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나뉜 속에서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가 앞으로 추구해야할 새로운 미래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변화의 요인들은 도시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와 도시활동의 양과 질의 변화를 의미하며, 아울러 도시공간의 구조적, 내용적 변모를 뒤따르게 한다. 이는 결국 도시행정의 수요대상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부응하는 행정자세와 정책, 제도, 조직의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의 도시성장이 물려준 현재의 도시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 빨리 우리앞에 닥쳐올 변화의 모습과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과제, 제공하는 기회를 예견해서 이에 대응하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맞이하는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21세기 구상” 사업을 향후 3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Ⅲ. 서울 21세기 구상

생일은 원래 먹고 마시는 잔치의 시간만은 아니다. 잔치를 통해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일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시간을 갖는 데에 생일의 참된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발상에서 서울시에서는 그간의 급성장 과정에서 퇴색되고 있던 우리의 뿌리를 다시찾는 일과 더불어, 곧 다가올 21세기를 그려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다지는 “미래구상”에 서울 600년 기념사업의 큰 즐거움을 두고 있다.

물론 여지껏 미래를 전망하려는 여러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21세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학자, 전문가들이 상당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여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낸 바 있고, 조선일보 등 언론기관에서도 한국의 21세기를 그리기 위한 토론의 장을 기획한 바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등의 여러 국책연구기관과 한국미

래학회 등 민간학술단체에서 각각 한국의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비록 시야의 거시성과 종합성, 논증의 과학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있기는 하나, 시정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중장기 계획을 정리해 놓고 있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미래학” 전문지도 출간되고 있어서 바야흐로 미래연구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싶다.

“서울 21세기 구상”은 물론 기존 미래연구의 성과위에서 출발한다. 그 출발점은 역시 서울이라는 지리적 실체를 공통의 범주로 하여 그동안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들을 한데 모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와 연구수준은 기존의 그것을 한걸음 넘어서는 데에 둔다. 단순히 개별적인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학”이라 해도 좋을, 하나의 새로운 지역학속에서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합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서울 21세기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우선 서울 21세기 구상에서는 제반 경제사회현상을 공간현상과 통합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아직까지는 경제사회현상은 경제사회현상대로, 공간현상은 공간현상대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컸다. 공간을 토대로 사회현상을 다루는 경우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미래전망이 서울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밀도있게 바라보는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서울 21세기 구상에서는 추상적이며 거시적인 시야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이며 미시적인 시각을 아울러 견지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 21세기 구상에서는 명실공히 학제간 연구태도를 유지하려 한다. 경제현상, 정치현상, 사회현상, 문화현상 각각의 부분적인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떻게 시민생활과 도시현실, 도시행정에 총체적인 변모를 가져오게 될 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여지껏 거의 독립적으로 취급되어온 산업경제계획과 도시계획, 도시계획과 사회발전계획, 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 21세기 구상에서는 “학술적”인 연구와 “실물경제적”인 감각을 함께 어우르고자 한다. 서울의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은 현실을 관조하는 학문분야에만 고유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도시현장에서 “뛰고 있는” 민간부문에서 더욱 예리하고 “실감있는” 미래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 관찰자와 실천가 양쪽으로부터의 기여속에서 서울 21세기 구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서울 21세기 계획은 하나의 전략계획이다. 미래구축을 위한 방향타를 정립하고 현 시점에서의 실천과제를 분명하게 세우는 데에 그 효용성이 있다. 결코 불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일이 아니라 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올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이다. 그러므로 서울 21세기 구상은 기본적으로 역동적인 연구일 수 밖에 없다. 정태적, 선형적인 미래예측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상을 그려놓고 이에 근접하기 위한 경로를 기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은 적실성이 없다. 비록 미래의 모습이 불투명하더라도 올바른 질문을 하고, 대답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과제를 명확하게 내보이는 일이, 선명하나 임의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21세기 구상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서울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서울의 미래가 ‘행정관료나 학자들만의 관심사일 수는 없다.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작던 크던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가는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의 미래가 가까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미래구상에는 “시너지”가 요구된다. 소수 전문집단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도시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바라는 미래를 그려보이고,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이다. 서울 60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서울 21세기 구상을 포함시킨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고려에서 서울 21세기 구상은 다원적인 형태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 사업에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구상과 진행을 이끌 “원로”조직은 “서울 21세기 위원회”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시, 건축, 행정, 재정 등 여러 분야의 중진 학자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주요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과제에 따라 관련인사들을 초청해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가지면서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서울 21세기 위원회는 다시 서울시의 두뇌집단인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 21세기 연구센터”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연구센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기존 인력 일부와 함께 소장 학자들을 많이 초빙하여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현안업무와 충분히 연결되면서도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여 21세기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위의 중심조직 외곽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연구소, 학회 등의 연구공조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연구공조체는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서울 21세기 구상의 진행을 돕고,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이 부여될 계획이다.

이러한 편제위에서 서울 21세기 구상은 3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93년에는 우선 미래 서울에 닥쳐올 주요 변화의 물결을 예비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한 광범위한 조사와 논의가 진행된다. '94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과제별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주요 시책을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각종 발표회, 세미나, 전시회, 국제 설계학교 등이 개최되어 시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95년에 이르면 이러한 연구와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21세기 구상의 내용을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발전시킨다.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이 그 중 큰 내용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5년 남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노정으로 진입한다.

Ⅳ. 변화의 관리와 환경학의 역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미래는 실현가능한 미래다. 이루어질 수 없는 미래, 꿈으로만 존재하는 미래도 그래서 충분히 흥미거리가 되지만, 변화를 관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실현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익숙한 눈앞의 현상을 보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변화의 조짐을 찾아내고, 그 변화가 일시적인 “변덕”인지, 구조적인 변동의 예고인지를 판단하여 그 변동의 의미와 파급효과, 실천적 과제를 밝혀내려는 것이 미래연구의 목적이다. 바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백지에 그려내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래연구에서 요구되는 것은 넓은 시야, 밝은 눈과 함께 투철한 현실인식이다. 현실인식이 결여된 미래연구는 몽상일 뿐이다. 이러한 일에 어떤 특수한 “방법론”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고유한 학문으로서의 “미래학”도 존재할 수 없다. 오직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미래를 다룬다고 해서, “환경학”이 다른 분야보다 방법론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실 하나의 통일된 학문으로서 환경학이 존재할 수 있는가는 의문거리다. 어떻게 보면 환경대학원 자체가 “한지붕 세 가족”처럼 관심영역과 기질, 방법론, 심지어는 세계관을 달리하는 여러 분야가 동거하는 집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서울의 미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모든 학문분야가, 그리고 학문과 “실무” 다같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래에 대한 탐구는 환경학에서 보다 더 절박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도 사실이다(환경대학원 교수 여러분이 한국 미래학회의 창설 회원이자 주요 활동인사라는 점도 이러한 명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서울의 미래구상에서 환경학에 남다른 역할이 기대되는 까닭은, 우선 환경학이 그 구성분야끼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총체적인 터전을 그 탐구대상으로 삼는다는 데에 있다.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공통의 문제, 삶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소를 개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최소한 프로그램 상으로는—환경학은 다른 학문과는 구별되는 넓은 시야를 전제로 한다.

또 하나, 환경학의 실천지향적 성격이 주목되어야 한다. 환경학은 계획과 설계, 정책과 집행을 전제로 하는 학문이라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이해와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바탕을 두고 현실을 변화시켜 보다 바람직한 세계를 만드는 데 환경학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측과 선택을 통해서 변화를 관리하는 일은 환경학의 본령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용한 자원을 판단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환경학의 존재이유라면, 옹당

미래연구는 환경학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마땅하다.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과 실제 그렇다는 것은 물론 다른 이야기다. 환경대학원이 자라온 지난 20년간 팔목할 만한 학문적 성취를 쌓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진정 서울, 아니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탐구와 고민의 양과 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실도시의 변화관리에 지혜를 빌려주어야 할 위치에 있었으나 환경학의 연구와 실천이 현실도시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도 벅했다고 하면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일 것인가?

미래의 전망은 폭 넓은 시야를 요구한다. 우리의 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과 더불어, 우리의 상황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외부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눈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별로 부지런하지 못했다. 좁게는 서울과 경협관계에 있게 될 동아시아 지역 도시들의 발전추세, 넓게는 우리가 충분히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세계의 경쟁도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관심과 가치관에 있어 폐쇄적, 고립주의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미래의 전망이 실천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이 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투철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있어서도 우리의 성취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한 것 같다. 현실인식이 투철하기 위해서는 현장성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실증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이념의 안경으로만 현실세계를 이해하려는 것은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려는 소아병적인 고집에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몇개의 기성 카테고리에 도시현실을 비추어 파악하려는 것은 안이하고 몽롱한 태도다. 실제의 도시상황에 대해서—그것이 도시경제의 움직임에 대한 것이던, 공간구조에 대한 것이던, 도시행정을 움직이는 제도와 행태에 대한 것이던—새롭고 치밀한 눈으로 집요하게 파헤쳐 현실도시를 유지, 변모시키는 기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무관심 역시 아직까지의 “환경학”문화의 특징이자 극복해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싫던 좋던 기술문명의 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변화가 좋은 예이다. 기술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과 일터가 자리잡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기술의 변화, 교통기술의 변화, 건설기술의 변화 모두 마찬가지다. 도시의 물리적인 형태 뿐 아니라 삶의 형태 자체가 기술변화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지만, 그동안 환경학에서는 대체로 기술문제는 “공학”의 문제로 넘긴 채 “점잖게” 인문, 사회현상에만 집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술과 사회, 문화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미래를 위한 변화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환경학의 관심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미래의 연구를 제약해온 또 하나의 고정관념은 “선형적”인 계획문화다. 종합계획은 부문계획을 완벽하게 규정하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을 꼼짝없이 통제하며, 장기계획은 단기계획을 철저하게 구속하고, 경제사회계획은 물리적인 계획으로 “번역”되지만, 그 반대 방향의 구속과 통제는 용납하지 않는 계획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고방식이 한 시대를 지배해 왔다. 이러한

선형적인 계획문화는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를 전제로 하지만, 전체주의적이었던 우리의 정치, 행정구조 속에서도 도시는 선형적인 모델과는 전혀 무관하게 성장, 변화해 왔다. 선형적인 계획문화는 미래를 고정된 청사진으로 본다.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변화를 관리해가면서 개척해 나가는 가능성의 세계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시점에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고 이를 거꾸로 “구현해나가야 할” 규범적인 대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관은 대단히 정태적이며 경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현실의 도시와 사람이 움직이는 기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미래관에 기초한 계획문화속에서 진정한 미래탐구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우리의 환경학이 진정한 의미의 미래지향적 연구문화를 키워내지 못했다면 이는 물론 환경학이 태어나 자란 연륜이 깊지 못한데에 그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보다도 환경학의 탐구와 이해노력이 미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 도시의 변화속도가 빨랐던 점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져야 한다. 환경학도 이제는 성년을 맞이했고, 서울 또한 급성장의 고비를 넘기고 거대도시로서 성년의 단계에 이르렀다. 보다 성숙된 눈으로 지난 시대의 성장 모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닥쳐올 변화의 양상을 차분하게 그려볼 때다.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같이 흘러가서는 안된다. 변화의 물결이 도시와 우리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가는지를 미리 보면서, 그 물결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도시와 환경학의 변화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학 스스로 변화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넓은 시야와 밝은 눈을 기르는 일, 현장성을 키우는 일, 보다 현실적인 계획문화를 키우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일에 앞서 필요한 일은 스스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이다. 환경학의 “환경학”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환경학의 비판학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는 성년이 된 환경학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21세기의 환경학과 도시서울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운영태: 제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계획학에 대해서 key word 두개를 배웠습니다. 그 하나가 comprehensive planning 이고 하나는 rationality 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의 근간이었고 환경대학원이 그 위에 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들이 그런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는 상당히 안정되고,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되는 사회이고 판단의 준거들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이고 제가 이것을 공부하던 한국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비교적 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니까 한국에서 이것이 안듣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여건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강박사님께서 논의하신대로, 매우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돌아와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상당히 떠밀려서 일을 했고 보고서는 이전의 포맷대로 계속 써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때 중요한 이슈를 제기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논의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계획이론을 전공하시는 교수분이 영국 도시계획학회에 참여하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손더스(Saunders)라는 정치경제학자가 판을 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계획하는 사람들이 자기 패러다임을 잃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준거들을 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판을 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학자와 실무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대개 그 동안에 나온 학생들을 보면 plan maker 아니면 관념론자가 아니었는가 하는게 특히 환경대학원 학생들을 만나면서 드는 느낌입니다. 계획분야의 개혁문제에 있어서는 현장능력, 현장 적응력이 강한 사람이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상철: 우리 환경대학원이 환경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붙이게 된 지 20년입니다만 사실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시절까지 합하면 25년이라는 역사, 4반세기 역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반세기 역사는 아마 우리 오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심한 변화의 장이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가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대상 지역인 것 같습니다. 1970년인가 우리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영어시험에 도시는 '변화의 무대이다' 라는 영작문 시험을 냈더니 어느 수험생이 "The city is a variety show" 라는 멋진 대답을 해 100점을 준 기억이 납니다.

역시 지난 25년간 서울을 비롯한 기타 모든 지역들이 variety show를 해왔습니다. 일부는 직접 출연자도 되고 관객도 되고 또 굶아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학과가 생길 때 유행하던 용어들을 좀 본다면, 도시성장, 도시화, 과열 도시화, 초도시화, 신개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73년 중화학 시대가 오면서 전국적으로 중화학 도시들이 건설되는 이런 시대에 환경대학원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그 당시 가장 유행하던 말이 공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0년 지나고 보니 그런 말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성장보다는 보존, 개발이나 공간이라는 말 대신에 환경, 신개발 대신에 재개발, 동북아 환태평양 시대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화도 hyperurbanization이라는 말 대신에 stagurbanization이 등장하였고 서울도 이제 작년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전체로서도 도시의 성장을 그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는데 20년전에 쓰여졌던 개념에 맞는 학문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환경대학원 내부에 있다가 이제 외부에 와서 보니 과연 외부에서 보는 환경대학원에 대한 기대는 좀 다르지 않는가, 그에 맞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썼던 패러다임이 없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지 못한 혼란기에 와 있습니다. 그걸 가장 쉬운 말로 '환경학' 이다 또는 환경계획, 환경설계, 환경관리 등 '환경' 자를 붙이면 좋은 걸로 여기는데 결국 그것은 아무도 정의할 수 없으며, 결국 '환경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환경학이다' 라고 밖에 정의를 못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따라서 장소와 시간의 맥락에 따라서 같은 말이 다르게 이해가 된다는 것은 패러다임을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역시 제 생각에는 1990년대 후반 21세기를 맞이 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전문가를 길러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새로운 전문가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병리학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도시 및 지역연구는, 임상에 자신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제간이란 차원을 떠나서 대학과 연구기관과 산업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coproduction 시대로 사람을 길러내고 학문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지나치게 문제를 좁게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을 좀 넓혀서 전국 내지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처방은 상당히 지구적으로 하는, 흔히 일본사람이 이야기 하는 'glocalization'에 적합한 'Think globally, act locally'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욕심을 낸다면, 지난 이십여년 동안 너무 급하게 파도를 타다 보니까 과거도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 현재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서울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맞이 하면서 서울이 당면해야 할 몇가지 거대한 물결들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적인 재구조화와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시대로부터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시 서울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광역화를 지혜롭게 맞이해야 되고,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중에서도 시가 차지하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이 만들고 있습니다. 민영화 내지 경영화에 대한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도 밖으로 클 자리는 없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뺏기던 힘을 내발적 체제로 정비 보완하여 재개발적 체제로, 그 개발의 힘을 전환시킬 것인지 하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거대한 흐름을 21세기를 향해서 어떻게 관리 하고 비전을 제시할까 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인적자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